

놀라운 적중률, 점수가 나오는 선행정학 모의고사

2022 김중규 선행정학

ALLPASS 모의고사 — 국가7급

문제편

PREFACE

「2022 국가7급 올패스 모의고사 선행정학」을 펴내며

지난 해에 더욱 새로워진 디자인과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였던 올패스 선행정학(예상문제 선행정학)이 올해에도 수험생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마다 행정학이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면에서 시험 종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9급과 7급,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형모의고사 교재를 단권으로 출간하다보니, 교재 분량도 많아지고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면에서 시험종류별로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저희 카스파(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에서는, 2019년부터 올패스 선행정학 동형모의고사집을 시험대상에 적합하게 다양화하여 시리즈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2022 국가 7급에 완벽하게 포커스를 맞춘 「2022 올패스 선행정학 국가7급 모의고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2022 올패스 선행정학 국가7급 모의고사」는 최근 7급 행정학이 9급과는 출제의 폭과 깊이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첫째, 철저히 2022 국가 7급 시험에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맞추어 21회분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한편, 국가 7급 시험이 2021년부터 PSAT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공과목 문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모의고사는 회당 25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법령 제·개정사항(「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발안법」, 「공무원노조법」 등)은 물론, 2020~2021 기출문제 경향까지를 모두 반영한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고, 기존의 문제도 개편 내용에 맞게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행정학이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 응용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참신한 응용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구성비율을 보면, 최근 기출 문제 30% + 기출문제 변형 40% + 신경향 응용문제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최근 시험장에 가면 늘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들의 최근 개정판 저서들을 참고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각종 행정학 이슈들을 중심으로, 신경향의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섯째, 각 회별로 예상평균점수와 상위20% 점수를 Test Stats로 제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이번 2022판은 해설집을 4도(컬러)로 전환하여 오답해설 부분 중 키워드에 반 밑줄 색깔 표시를 함으로써 틀린 부분을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시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학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제2과목	행정법
제3과목	행정학	제4과목	경제학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1회 모의고사

01 정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에서 고른 것은?

- ㄱ. 관리규제란 정부가 피규제자가 만든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대표적 예이다.
- ㄴ. 포지티브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 ㄷ. 포획이론은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말한다.
- ㄹ.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수혜자와 소수의 비용 부담자가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ㅁ. 규제피라미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02 조직의 갈등관리 방법 중 해소전략에 속하는 것을 다음에서 고른 것은?

- ㄱ. 회피
- ㄴ. 상위목표의 제시
- ㄷ. 협상
- ㄹ.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 ㅁ. 인사이동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03 행정의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외성은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적응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기능이 중첩·중복되는 조직에서는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조직 간의 충돌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 ② 가외성이 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③ 가외성은 대체수단의 확보 등으로 수단과 목표의 전도 현상을 완화시킨다.
- ④ 조직의 과업환경이 이질적이고 불확정적인 때에 가외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생존가능성이나 과업 성취가능성이 높다.

04 국채 우선 상환 이후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다음에서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 ㄷ.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
- ㄹ.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ㅁ. 기타 채무(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등) 상환

- ① ㄱ → ㄴ → ㄹ → ㅁ → ㄷ
- ② ㄱ → ㄴ → ㅁ → ㄷ → ㄹ
- ③ ㄱ → ㄴ → ㅁ → ㄹ → ㄷ
- ④ ㄴ → ㄱ → ㄹ → ㅁ → ㄷ

05 다음 중 2022.5.1. 현재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중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며, 투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하지 아니하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

06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 ④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07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 ② 거래비용은 탐색비용, 거래의 이행 및 감시 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08 일반적인 조직구조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계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 ㄴ.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 ㄷ.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구조가 이뤄진다.
- ㄹ.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와 행정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불편 부당한 직무활동을 통하여 공익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 ④ 지나친 정치적 중립의 강조는 공무원집단을 오히려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

22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조직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된다.
- ② 학습조직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 ③ 학습조직은 외부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제공한다.
- ④ 학습조직은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학습보다는 공식적이거나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활동을 강조한다.

23 경쟁적 가치 접근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퀸과 로보그(R. E. Quinn & J. Rohrbaugh)는 조직의 효과성은 이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이익과 가치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이 접근법은 조직구조가 통제를 강조하는지 유연성을 강조하는지와 조직의 초점이 인간인지 조직 자체인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네 가지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은 개방체제 모형, 합리적목표 모형, 내부과정 모형, 인간관계 모형이다.
- ④ 이 접근법은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합리적 목표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24 다음 중 2022.5.1. 현재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중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인 것으로만 올바르게 묶여진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ㄴ. 지방의회 의원 선거
- ㄷ. 주민감사 청구
- ㄹ. 주민조례 청구
- ㅁ. 주민투표
- ㅂ. 주민소환투표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ㅂ

제1회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①	03	①	04	②	05	③
06	①	07	①	08	②	09	①	10	①
11	③	12	③	13	③	14	③	15	①
16	④	17	②	18	③	19	②	20	②
21	②	22	④	23	④	24	③	25	①

01

★★

ㄱ, ㄴ, ㄹ은 맞고 ㄷ, ㄺ은 틀리다.

☑ ㄴ [×] 포지티브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규제**방식에 해당한다.

ㄹ [×] 고객정치가 아니라 편의와 비용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익 집단정치**에 해당한다.

☞ 규제방식의 다양한 구분

구분	종류	개념	피규제자의 자율성
규제 방식	포지티브	원칙금지, 예외허용	낮음
	네거티브	원칙허용, 예외금지	높음
규제 주체	직접규제	정부(규제주체)가 기업(객체)을 직접 규제	낮음
	간접 규제	공공 민간단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규제	높음
		자율 규제대상자가 규제주체가 되어 스스로 규제	
규제 대상	수단규제	투입(기술이나 수단, 행위)을 사전 규제	낮음
	관리규제	작업 또는 관리과정을 규제	중간
	성과규제	목표달성수준만을 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	높음
규제 시기	사전규제	행위이전을 규제(수단규제)	낮음
	사후규제	행위이후를 규제(성과규제)	높음

02

★★

ㄱ, ㄴ, ㄷ은 갈등해소전략에 해당하고, ㄹ, ㄺ은 갈등조정전략에 각각 해당한다.

☑ ㄱ [○] Thomas가 제시한 갈등해소전략 중 하나로 자신의 욕구가 비단 정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협조도 비협조적인 경우이다.

ㄴ [○] 하위부서 간 갈등은 상위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ㄷ [○] Thomas가 제시한 갈등해소전략 중 하나로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에 대한 협조가 중간 정도인 경우이다. 갈등 당사자가 상호 일부 양보하는 전략이다.

ㄹ [×] 리더십 스타일이나 정보전달통로의 변경은 **갈등조정전략**에 해당한다.

ㄹ [×] 인사교류는 갈등해소전략이지만, 인사이동은 **갈등조정전략**에 해당한다.

☞ 갈등관리전략

갈등 해소 전략	(1) Thomas의 전략 ① 회피, ② 순응, ③ 타협, ④ 경쟁, ⑤ 협동
	(2) 일반적인 해결방안 ① 문제의 공동해결 ② 상위목표 설정 ③ 집단 간 상호의존성 감소 ④ 자원의 확충 ⑤ 청원시스템 (공식경로를 통한 고충 해결) ⑥ 공식적인 계층제에 의한 방법 ⑦ 평가기준과 보상시스템 ⑧ 갈등집단의 통폐합 (조직통폐합) : 구조적 요인(변수)의 개편 ⑨ 공동경쟁대상 (공동의 적) ⑩ 기타 리더십의 발휘, 의사전달의 촉진, 인사교류 ¹⁾ 및 공동교육훈련, 상의이념(상위목표)의 제시(Gulick), 조정기구에 의한 방법, 협상·타협과 완화 ²⁾ , 태도변화 등
갈등 촉진 전략	①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 : 정보량의 조절 (억제 또는 확대)이나 정보전달 통로의 의도적 변경 ② 제도적 갈등조장 방안 : 조직개편(분화)이나 직무재설계 ③ 충격요법적 방법 :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앞당기거나 외부집단의 도전이나 위협을 느끼도록 유도 ④ 인사정책적 방법 : 순환보직 등 인사이동 ¹⁾ ⑤ 경쟁상황의 창출 : 보수·인사 등에 있어 경쟁원리 도입 (성과급, 공모·개방형직위 등) ⑥ 기타 직위관계의 재설정, 태도변화 등

1) 일반적으로 인사교류는 갈등해소전략, 인사이동은 갈등조정전략으로 본다.

2) 완화란 유사성과 공동이익을 부각시키는 피상적 해소방안이다.

03

★★

가외성은 행정의 여유분 또는 남는 부분으로 조직의 적응성은 높여주지만 **능률성**과는 상충된다. 가외성이 0인 상태가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 ② [○]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가외성이 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외성은 중첩된 조직구조이므로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조직 간의 충돌가능성이 높다.

③ [○] 가외성은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대체수단의 확보 등으로 수단과 목표의 전도 현상을 완화시켜준다.

④ [○] 위기가 존재하거나 과업환경이 불확실할 때에 가외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생존가능성이 높다.

☞ 가외성의 특징과 효용, 한계

의의	불확실성(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의 여유분 ① 중첩 : 하나의 기능을 공동으로 관리 (상호 의존·협력) ② 중복 :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관여 없음) ③ 동등참여력 : 주된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때를 대비한 보조 조직(여유분)
	효용 불확실성 하에서 적응성·신뢰성·안정성·창조성 확보
	한계 능률성(경제성) 저해, 자원의 한계, 갈등과 대립, 책임 모호

04

★★

②

국채우선상환이후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는 ㄱ - ㄴ - ㄷ - ㄹ 이 맞다. 국채우선상환이란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상환에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

ㄱ 세계잉여금 사용 용도(「국가재정법」 제90조)

국채우선상환, 법률에 의한 지출, 이월할 금액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다음 순서대로 사용

- ① 지방교부세의 정산
- ② 공적자금 상환금에의 출연(잔여잉여금의 30% 이상)
- ③ 국가채무(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잔여잉여금의 30% 이상)
-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 ⑤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05

★★

③

③만 옳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제1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① [×]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주민투표법」(2022.4.26. 시행)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2022.10.27. 시행이므로 2022.5.1.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지문은 "규칙"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리다.

② [×] 종전에는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개정된 「주민투표법」(2022.4. 시행)에 따르면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도록 하였다.

④ [×]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주민투표법」(2022.4.26. 시행)에 따르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하고 종전에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하였다.

ㄱ 주민투표제도 개편 주요 내용(「주민투표법」 개정(2022.4.26. 시행))

- ①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②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2022.10.27. 시행).

③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 :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④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 변경

-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함.
- 주민투표의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날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일 전 2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⑤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

-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⑥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⑦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함.

06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있지 않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② [○]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된 제도이다.

③ [○]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 최초로 실시되었다.

④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에 의한 직접 참여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위축 또는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

- ⑩ 분명한 리더십 중시 : 공유 · 분배된 리더십
- ⑪ 기능분립적 구조의 편협함(문맹) 배격
- ⑫ 구성원의 권한 강화

23

★★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 권과 로보는 '어떤 조직이 효과적인가'는 가치판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③ [○] 경쟁적 가치 접근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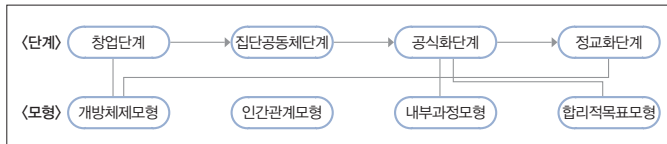
☑ 효과성 평가를 위한 경쟁적 가치 접근법(Quinn & Rohrbaugh) ¹⁾

구조	조직(외부)	인간(내부)
통제	[합리목표모형] - 합리문화 ²⁾ • 목적 : 생산성, 능률성 • 수단 :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내부과정모형] - 위계문화 • 목적 : 안정성, 통제와 감독, 균형 • 수단 : 소통관리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 발전(혁신) 문화 • 목적 : 성장, 자원획득, 환경적응 • 수단 : 유연성, 용이함, 준비성	[인간관계모형] - 집단문화 • 목적 : 인적자원 발달, 팀워크, 능력발휘, 구성원 만족 • 수단 : 응집력, 사기

1) 하나의 조직도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용모형이 달라진다.

2) Quinn 등은 경쟁적 가치접근법을 통하여 조직효과성모형을 조직문화유형론으로까지 연계 · 발전시켰다.

☑ 조직성장단계별 경쟁적가치접근법의 적용



24

★★

ㄱ, ㄴ, ㄷ, ㄹ, ㅁ은 18세이고, ㅂ만 19세이다.

☑ ㄱ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령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0.1.14. 시행)으로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되었다.

ㄴ [○] 지방의회 의원 선거

ㄷ [○] 주민감사 청구연령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2022.2.13. 시행)으로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되었다.

ㄹ [○] 주민조례 청구연령은 최근 「주민조례발안법」 제정(2022.2.13. 시행)으로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되었다.

ㅁ [○] 주민투표연령은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2022.4. 시행)으로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되었다.

ㅂ [X] 주민소환투표연령은 아직 19세이다.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개정 법률안이 2022.5.1. 현재 국회계류중에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주민참여제도 개편 종합(2022.5.1. 현재)

		현행	개편	시행일	
주민 조례 청구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2022. 1.13.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 ~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	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 미만 기초단체 : 1/20		
	처리시한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주민 감사 청구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서명인원	광역	500명		300명
		50만	300명		200명
		기초	200명		150명
청구시효	2년	3년			
주민 소송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주민 투표	투표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2022. 4.26.	
	청구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모두 ①)		
	청구방법	서면서명	서면서명 + 전자서명		
	투표일	발의일부터 23~30일 이내에서 단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결정	발의일부터 23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투표방식	현장투표	현장투표 + 전자투표		
	확정요건	1/3 이상 투표, 과반 찬성	1/4 이상 투표, 과반 찬성		
	개표요건	1/3 이상 미투표시 개표 없음(부결)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		
주민 소환	투표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국회 계류중	
	확정요건	1/3 이상 투표, 과반 찬성	1/4 이상 투표, 과반 찬성		
	개표요건	1/3 이상 미투표시 개표 없음	1/4 이상 미투표시 개표하지 않음		

1) 2022.10.27. 시행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행정학의 선을 또한번 새롭게 긋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2년 5월 9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03-2

값 22,000원



9 791192 405032